

# 文 “韓,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 더 많은 보급·지원 기여”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 참석  
바이든, 백신접종 확대 등 목표 제시  
文 “125개국과 방역물품 나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인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 형태로 주재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은 함께 회복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코로나를 넘어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인류 공동의 노력에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극복 차원의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비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23일(한국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위한 연설을 촬영하고 있다.

회복과 재건을 위해 따뜻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국은 언제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한 축을 맡은 점도 소개했다.

이어 ▲코백스(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에 2억 달러 공여 약속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따른 네 종류 백신 위탁 생산 등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가 기여한 점을 언급한 뒤 “더 많은 백신 보급과 지원으로 코로나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포용적 보건 협력에 앞장서고, 국제 보건안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엔과 WHO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125개국과 방역물품을 나눴으며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별 지원을 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ODA의 꾸준한 확대로 포용적 회복에 함께 하고, 개발도상국이 보건 역량을 총체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돋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강조를 두고 “코로나19 대응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대장동 의혹 입장요구에 “왜 청와대에 묻나”

靑 “대선판 끌어들이기 중단하라”  
윤석열 전 총장, 정부·여당 겨냥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 의혹’을 두고 야권 대선주자가 청와대를 공격하자 경계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데 대해 “(청와대를) 대선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굉장히 광범위한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결부돼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가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입장인지 물어봐 달라”며 정부

·여당을 겨냥해 비판한 바 있다.

박수현 수석은 윤석열 전 총장 공세를 겨냥한 듯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걸 왜 청와대에 묻느냐, 거꾸로 여쭤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에 ‘정치적 중립’ 준수와 방역·백신 접종·민생에 집중하라고 당부한 메시지를 전한 뒤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에 주신 권한, 의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 과정에서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장동 의혹 관련 글 비공개 처리’와 관련한 비판에 “국민청원에 관한 업무는 내 소관”이라며 “정치화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선거 기간 중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는 원칙이 있다. 지난 달에 운영방침을 이미 밝혔고, 모든 선거 때마다 그런 원칙을 지켜왔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

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한 데 대한 야당의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라는 비판과 관련 “(남북) 신뢰 구축의 첫 단계, (즉) 비핵화에 이르는 여러 단계들을 추동해내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미국 순방 기간 방탄소년단(BTS)과 유엔총회 일정에 참석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인기를 이용했다’는 비판이 일자 “UN총회 주제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데, 그것이 어떻게 팬데믹을 극복하며 미래 세대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주제가 함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고, 미래 세대 대표인 청년 대표인 BTS를 UN이 초청한 것”이라며 이어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김은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 국민의힘·국민의당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법 제출

국정조사 요구서 등 국회 제출  
발의자, 양당 의원 107명 전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여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류를 제

출하기 위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경기도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추진 내역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내역 및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관련 사안 ▲대장동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 및 투자자 관련 사안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 배당 관련 사안 등이 포함됐다.

특검법과 국조안 발의자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 10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업은 사업 선정 과정, 사업 구조, 수익배분 구조 등 수많은 의혹을 낳

고 있어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면서 “이재명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바 있고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만큼 훼손한 이재명 캠프 민주당 의원들도 특검법과 국조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이 사안은 국민전체가 공분하고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여당의 미온적 태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함께 한 건 야당이 공조해 하루빨리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권 원내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특혜를 제도화한 것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처럼 사후에 수익률 배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업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제도적 특혜 사업을 반드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패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4대강 예산보다 많다”… 최재형,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국토부 추정예산 최대 29조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이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원이나 더 사용하게 될 가덕도로의 변경은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취임 후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이 23일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밝힌 디들 공감하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두 번째 정책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라는 물음엔 “취임 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6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 부지로 김해신공항을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하고 김해신공항 검증 위원회가 출범해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했다. 이후 작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2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 전 원장은 “기존 김해신공항 예산은 4조~6조원 정도로 추산됐다”며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부 추정예산이 12조원에서 최대 29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란이 많았던 4대강 사업 예산보다 더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2019년 12월 출범)의 보고서는 계획의

전면 백지화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며 “가덕도로 변경하라는 결론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가지 계획안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검증조차 받지 않은 다른 안으로 결정해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전 원장은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 후 한 달도 채 못 돼 법안이 발의되고, 단 3개월만에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몰이를 위해 급히 추진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될 수 없다”며 “그저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옮기고,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매표성 입법”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